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 학
변호사·현물결아트센터 대표

우리는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 반가워하며 만나자고 한다. 그러나 만나서 무엇을 하는가? 집값이나 대장동 사건, 이재명과 윤석열·홍준표를 이야기한다.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뉴스와 정치인을 만날 뿐이다. 친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발행하는 ‘월간독자 Reader’를 즐겨 보낸다. 그러면 그들은 “독자는 얼마나 되나, 돈은 되나?”부터 묻는다. 편집위원 중에 유명 인사라도 있으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 한다. 글에 담긴 진실을 나누고 싶은 데 사실만 알아내려고 애쓴다.

언젠가 수십 년 동안 고위 공직에 있던 사람의 전 재산이 몇천만 원에 불과한 걸 두고 언론에서는 그가 청렴결백하다고 떠들여댔다. 알고 보니 그는 퇴근 후 술집에 틀어박혀 월급을 술로 낭비했다. 그가 청렴한 공직자였을까. 무책임한 가장이었을까? 재산이 적다는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 재산을 탕진한 무책임한 진실은 덮여 버린다.

현 정권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주택값이 안정될 거라고 큰소리쳤다.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세금이 오르면 만큼 주택

종교칼럼



중 현
광주 중심사 주지

우리 사회는 관계 중심적인 사회다. 정이 중요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개인이 달라진다. 관계 중심적 사회에서 우리는 ‘관계’에 질식되고, ‘관계’에 끌려 나뉘었다. 관계의 중앙감에 질쫄리다 못해 ‘관계’라는 틀에 스스로를 끼워 맞춘다. 심지어 여러 개의 자아를 당연한 듯 지니고 살았다. ‘정’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서가 최근까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였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한 동아리에서 템플스테이를 왔다. 1박 2일 동안 그들은 그 어떤 자체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았고, 동시에 사중에 그 어떤 프로그램도 요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일어되었다. 식사 외 모든 시간은 자유 시간이었다. 단체로 오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참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숙식 제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동아리 회원은 아니지만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했지만, 적잖이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

기 고



전 찬 호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장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센터)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아파트 종사자 고용 현황’ 전수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1139개 아파트단지에 종사하는 관리노동자는 경비원 4036명, 청소미화원 3088명, 전기설비원 1362명, 관리소장 966명, 경리회계원 750명으로 모두 1만 20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지역 대기업 인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노조원 수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 형태는 경비원과 청소미화원의 99%가 용역 위탁계약직이었고 심지어 아파트 모든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소장마저 90%가 계약직 신분이었다. 대다수 시민의 생활 주거지인 아파트단지에 엄청난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 직장내 괴롭힘, 저임금 등 여러 가지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아파트 종사자들 또한 재계약이나 용역업체 변

사실과 진실, 대장동 사건을 보라!

값도 임대료도 올라 결국 서민들의 집 구하기는 훨씬 더 힘들어졌다. 이것이 진실이다.

미국과 패권을 다틐던 소련이 공산화 초기 무상분배로 열렬한 박수를 받았지만 점점 국민을 무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국민은 거지꼴이 되었다. 무상으로 돈만 풀면 생산 증가는 없는데 시중에 돈만 쌓여 물가가 올라 생활은 오히려 궁핍해진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세금을 더 부과해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소득이 늘고 소비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 소득이 또 증가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했다. 부분 부분의 사실만 쫓으면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야 했다. 과연 그랬는가!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를 현 정권이라고 볼랐을까?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표를 얻기 위해 그럴듯한 이론을 사실처럼 내세워 합법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이 진실 아닐까.

대장동 사건도 ‘누가 얼마를 먹었느냐’ 같은 단편적 사실이 강조될수록 거대한 진실은 덮이고 만다. 택지개발은 기획 단계부터 비용과 수익을 미리 계산하고 실행에 들어간다. 아파트 몇 채를 얼마씩 분양할지 곱하기만 하면 수입이 정확히 계산되고, 땅값과 건축비를 평당 얼마로 할지 곱하면 비용도 아주 쉽게 계산된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나중에 아파트값이 얼마나 오르고 수익이 얼마나 될지 인가할 때 어떻게 알았겠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일반적 인 사실을 끌어들이는 그럴듯한 거짓이다. 택지개발업자가 분양가에 따른 수익과 분배를 시뮬레이션해 보지 않고 개발을 시작할 리도 없고, 인가권자가 그걸 검토하

지 않고 인가할 리도 없지 않은가. 이것이 진실이다.

당시 인가권자였던 이재명은 나중에 분양가가 5억 원으로 오르면 그 수익에 따라, 10억 원으로 오르면 더 많은 초과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익 분배까지도 택지게 발 시초부터 훤히 알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가 당연히 놓아야 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빠뜨렸다면 명백한 배임일 뿐더러 스스로 부실한 행정가임을 자인한 것이다.

지금도 반값주택이니 기본소득이니 무엇 무엇을 해 주겠다는 후보들이 많다. 약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공약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반값주택이나 기본소득을 줄 만큼 돈을 가진 것도 아니다. 누군가로 부터 빼앗아 주겠다는 것인데 강도나 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장동 특혜 사건을 보라! 강도가 빼앗은 것을 강도가 갖지 누구에게 나누어 주던가. 이것이 진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공약에 열광한다. 거짓이 사실을 덮고, 사실이 진실을 덮을 때 세상은 암흑에 갇히게 된다.

곧 대통령선거가 다가온다. 대통령감이 없어 걱정이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거짓을 사실로 말하고, 사실로 진실을 덮는 후보들에 열광하는 우리들의 탁한 눈이 아닐까. 진실은 진실을 찾으려는 자에게만 다가오는 선물이다. 그럴듯한 사실과 거짓으로 국민들을 눈멀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맑은 눈이 간절하다.

※ 이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社 說

민주당 이젠 모두 하나 되어 정권 재창출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폭풍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수용’으로 일단락됐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그제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 전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 서 사흘 만에 경선 불복 논란이 잦아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입당문을 통해 당무위 결정을 존중해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함께 강물이 되어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이루자”고 했다. 지지자들에게는 민주당 원팀으로 대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도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이름으로, 동지의 이름으로,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다 같이 주인공이 되어 뛰자”고 화답했다.

자칫 분열로 치달을 수도 있었던 이러한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 이제 민주당은 원팀을 이뤄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진정한 원팀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 전 대표

는 어제 캠프 해단식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있는 나’는 질문과 ‘원팀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기에 이 전 대표 일부 지지자들은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진정한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와 선대위가 무엇보다도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에 상처를 주는 발언도 있었던 만큼 이제 패자를 따뜻하게 끌어안지 않고서는 원팀으로 나갈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 앞에 높은 ‘대장동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야 한다. 민주당이 곧바로 대장동 대응 TF를 꾸린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총력 대응으로 난제를 극복하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야 한다.

전남 다이옥신 최다 배출 저감 대책 절실하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치를 넘긴 소각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되면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1092곳 중 140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법정 기준치(5ng-TEQ/Sm³)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적발된 18곳 중 전남 지역의 소각시설은 무려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완도가 5곳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신안과 담양에서 각각 한 곳의 소각시설도 법정기준치를 넘겨 배출하다 적발됐다. 다이옥신 초과 배출 시설 중에는 법정 기준치를 90배나 넘긴 곳도 있었다. 이는 전남 지역 주민들이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

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업체가 측정 기관에 의뢰해 조사하는 허술한 제도가 다이옥신 배출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른바 ‘셀프 검사’ 제도 때문에 최근 5년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은 없었다. 최근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된 시설 45곳 가운데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이뤄진 시설도 3곳에 그쳤다.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 당국은 전남 지역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철저한 원인 진단과 함께 시설 보강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건강하게 살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無 等 鼓

한비자(韓非子)에 ‘화숙최난’(畫孰最難)이라는 제목의 우화가 나온다. 화숙최난은 ‘무엇이 가장 그리기 어려운가?’라는 뜻이다.

제나라 왕의 식객 가운데 화가 한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이 화가에게 물었다. “무슨 그림을 그리기가 가장 힘든가?” 화가는 “개나 말을 그리는 것이 어렵 습니다”라고 답한다. 왕이 재차 묻는다. “그렇다면, 무슨 그림을 그리기가 가장 쉬 운가?” 화가는 망설임없이 “귀신과 도깨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라고 했다.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왕에게는 곧바로 설명을 해 준다. “개나 말은 사람들이 날마다 보는 대상인이라 진짜와 흡사하게 그려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아침저녁으로 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려야 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반면 귀신이나 도깨비는 눈앞에 있지도 않고, 본 사람도 없고, 형체도 없는 터라 마음대로 그려도 됩니다. 귀신을 담지 않았다고 증거를 제시하거나 따질 사람이 없으니 그리기가 제일 편합니다.”

귀신처럼 근거가 없는 허황된 사실이나

논리를 경계하는 고사성어이다. 검증할 수 없는 과장된 말이나 주장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주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보려는 배경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때도 그 이면을 훑어 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인들의 말처럼 믿기 어려운 것도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나 정당의 입장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정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을 퍼붓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요즘만 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야야 정지인들은, 의혹의 의혹을 설명을 해 준다. “개나 말은 사람들이 날마다 보는 대상인이라 진짜와 흡사하게 그려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아침저녁으로 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려야 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반면 귀신이나 도깨비는 눈앞에 있지도 않고, 본 사람도 없고, 형체도 없는 터라 마음대로 그려도 됩니다. 귀신을 담지 않았다고 증거를 제시하거나 따질 사람이 없으니 그리기가 제일 편합니다.”

귀신처럼 근거가 없는 허황된 사실이나 논리를 경계하는 고사성어이다. 검증할 수 없는 과장된 말이나 주장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주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보려는 배경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때도 그 이면을 훑어 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인들의 말처럼 믿기 어려운 것도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나 정당의 입장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정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을 퍼붓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요즘만 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야야 정지인들은, 의혹의 의혹을 설명을 해 준다. “개나 말은 사람들이 날마다 보는 대상인이라 진짜와 흡사하게 그려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아침저녁으로 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려야 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반면 귀신이나 도깨비는 눈앞에 있지도 않고, 본 사람도 없고, 형체도 없는 터라 마음대로 그려도 됩니다. 귀신을 담지 않았다고 증거를 제시하거나 따질 사람이 없으니 그리기가 제일 편합니다.”

귀신처럼 근거가 없는 허황된 사실이나

더불어 행복한 아파트, 노동인권 상생협약

경시 극도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하소연조차 못 하는 것은 여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수의 입주민 대중에 사용주라는 점과 경비원·청소미화원의 경우 60~70대 고연령대라는 점에서 아파트 종사자들의 문제는 또 다른 심각성을 안고 있다. 분리 수거나 주차 문제로 벌어지는 입주민과의 갈등은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다. “내 돈으로 월급 주는데,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자르는 것 아무 일도 아니다”는 입주민의 전근대적인 태도에 가슴속 깊이 장탄식을 쏟아내기도 한다. 또한 입주민의 심 없는 민원 제기에 견디다 못한 관리소장들이 1년에도 몇 차례씩 교체되는 경우도 흔한 편이다.

이에 비정규직센터는 모든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5년여 동안 아파트단지들을 뛰어다니며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왔다. 경비원·청소미화원 모임 지원, 법률 구제 및 노동인권 교육, 아파트로 찾아가는 입주민 노동 상담, 입주자 대표단 교육, 아파트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 캠페인, 각종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 노사갈등 조정 및 중재 활동 등을 진행해 왔고 이는 타 지역의 롤 모델이 되기도 했다.

마침내 ‘더불어 행복한 아파트, 노동인권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으로 조금씩 그 결실을 맺어 가고 있

다. 상생협약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측은 경비원, 청소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모든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인권 보장에 노력한다’ ‘관리 노동자들은 입주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비정규직센터는 입주민 교육, 갈등·중재, 우수 아파트 포상 및 홍보를 담당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45개 아파트단지가 참여했다. 이 중 모범적으로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6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 포상도 하고 있다. 상생협약은 올해 말까지 50개 단지를 목표로 하며 내년에도 연중 지속 사업으로 추진한다.

물론 세 주체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관리 노동자를 대하는 입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입주자 대표단의 꾸준하고도 적극적인 활동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상생협약은 공동주택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나와 가족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공동체를 위해 따 흐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마음속 법령’이 되었으면 한다.

상생협약이 존중과 배려로 더불어 행복한 아파트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입주자 대표자 회의와 관리 주체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본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치 부 220-0632	에 항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본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